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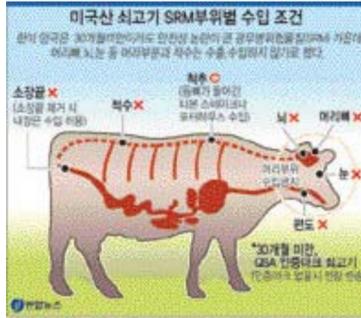
쇠고기 추가협상 어떻게 진행됐나

한미 정상 통화 → 기자회견 ... '5단계 전략' 주효

“한미 동맹 훼손” 으름장 ... 美 결단 끌어내
“李 대통령 기자회견 美 압박 요인 됐을 것”

한국 정부가 미국과 쇠고기 추가 협상을 벌이면서 '한미 정상 간 통화' - '협상 개념 재규정' - '김중훈 본부장 방미' - '청와대와 백악관의 협의라인 가동' - '이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 등 '5단계 전략'을 구사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2단계는 양 정상 간 통화를 토대로 협상의 성격을 그 동안의 '재협상에 준하는 협의'에서 '추가 협상'으로 개념을 재규정하고 김경관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정부 대표단, 한나라당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 카운터파트별로 막연 협의를 진행했다.
3단계는 물밑 협의에서 이뤄진 상황 진전을 기반으로 김

중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가 공식 협상에 착수했고 4단계는 미 무역대표부(USTR)와의 협상이 난관에 부딪히면 청와대와 백악관 간 협의의 라인을 가동해 지원에 나섰다.
마지막 5단계는 이 대통령이 추가 협상이 최종 고비를 넘는 시점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재천명,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략을 택했다.
핵심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특별 기자회견을 한 것이 미국에 압박요인이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더 이상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한국과의 신뢰관계, 동맹관계의 미래에 훼손이 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치적 결단을 내린 것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런 협상 과정에서 김경관 전 수석은 ▲백악관과 추가 협상이 한국 소비자의 신뢰가 회복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하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되며 ▲미국의 대선기간 불가할 수 있는 관련업체 및 의회의 반발과 통상마찰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미국-타



국 간 쇠고기 협상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등의 '4가지 원칙'에 합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협상에서는 난항을 거듭했다고 한다. 특히 미국은 한국과의 추가 협상 내용이 향후 다른 나라와의 쇠고기 협상의 기준이 된다면서 양보 불가 입장을 고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 막판 김 본부장이 중도 귀국을 할 뻔한 정도로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히고 험한 말까지 오갔다는 후문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WTO 위반 피하고자 QSA 합의

〈품질체계평가〉

■추가협상 주요 쟁점 풀이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 실효성 여부

▲당초 정부가 EV 도입을 요구했는데, QSA에 합의한 이유는=미국 정부가 EV에 반대한 이유는 업계 자율 합의가 아닌 정부 간 공식 합의에 따라 시행하는 EV의 경우, 미국 정부가 30개월이상 쇠고기 수출을 공식적으로 제한함으로써 WTO 협정 위반 소지가 생기는 점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한국 QSA 프로그램'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 품질관리를 위한 QSA에 한국 수출용 쇠고기의 연령 확인을 추가함으로써 미국산 쇠고기가 30개월 미만임을 입증하는데 효과적 프로그램이다.

▲QSA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은 작업장의 한국 수출 가능여부=이들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에 대해서는 수출검역증에 "한국 수출용 QSA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됐다"는 표기가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수출 가능성이 차단된다.

▲QSA 프로그램을 승인받은 작업장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QSA 프로그램은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이지만 일단 참여하면 모든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내장·허 등 안전항가. 美 유통 구분 받을 수 있다.

▲곱창·허·사골·꼬리뼈 등의 전문 수입 금지 왜 반영안했나=국제수역사무국

(OIE)는 2005년 5월부터 내장 전체가 아닌 회장위부분(소장끝 50cm)만 SRM으로 규정하고 있다.

▲30개월미만 머리뼈의 경우 뺏조각이 발견돼도 반송하지 않는다는데 그 기준은=우선 뇌·눈·척추·머리뼈는 수입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30개월 미만 소에서 SRM이 아닌 뇌·눈·머리뼈·척추를 우리 수입업체가 주문하는 경우 차단할 수 있나=추가 협상 결과, 두 나라는 30개월 미만 소에서 4개 부위가 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검역시 발견되면 한국 정부가 반송 조치한다'는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하는데 합의했다.

◇검역주권 확보 충분항가

▲검역주권 강화했나=수출작업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우리측이 상당한 승인을 행사할 수 있다. 이미 30개 작업장에 대해서는 우리정부가 현지점검을 거쳐 승인했다. 향후 90일동안 우리정부에 의해 승인될 작업장을 고려하면 미국 전체 쇠고기 생산량의 70~80%정도에 해당돼 사실상 대부분의 수출물량이 우리정부의 승인권 아래에 있게 된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발생할 경우 조치는 =미국에서 광우병이 추가로 확인되면 일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한다. 그리고 미국측과 협의해 우리측 검역 전문가와 미국측이 공동으로 발생원인 등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김중훈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21일 외교통상부에서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for Standard Chartered Bank. The main headline reads "대한민국의 지갑을 든든히 지키고 키우겠습니다" (We will firmly protect and grow the wallets of the Republic of Korea). Below this is an image of a white wallet with the South Korean flag design. The ad promotes the bank's global financial services and its commitment to supporting the Korean economy. It includes the text "당신을 위한 글로벌 금융파트너! SC스탠다드 상호저축은행이 옵니다" (Your global financial partner! SC Standard Mutual Savings Bank is here for you).

“달라진 것 없다 ... 재협상 하라”

광주·전남 한우협회·농민단체, 내달 9일 상경 투쟁

지난 21일 발표된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광주·전남지역 축산농민과 관련단체들은 “지난 4월 미국산 쇠고기 전면 수입개방을 발표했을 때 이번 협상내용이 크게 달라진 것 없다”면서 “재협상 관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 광주·전남지역 농민단체와 한우협회 등은 오는 7월 9일 상경투쟁을 통해 ‘한·미 쇠고기 협상과 한·미FTA 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축산농민 등은 22일 “추가 협상 내용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먼 기만적인 꼼수”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광우병 논란의 핵심인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 뼈와 내장 등을 수입금지거나 자용수입규제로 완화했을 뿐 아니라 30개월 유통제한 역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수출증명(EV) 프로그램을 관철하지 못했다

현지작업장 점검권은 일부 표본조사의 작업장 조사권일 뿐 그 작업장을 조사해서 중대한 문제를 발견해도 작업장 취소나 검역중단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남배 광주·전남한우협회장은 “추가협상으로는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음이 명확해졌다”며 “오직 협상무효, 전면 재협상만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의 시나리오대로라면 LA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는 다음달 중·하순께 시중에 대량 풀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광주축협 관계자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우 사육농가들의 위기가 현실화될 우려가 높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철저한 쇠고기 유통관리 대책과 함께 농가지원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남배 회장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40% 이상 치솟은 사료에 대한 안정대책,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한 친환경 축산농가 피해보전직불제 등을 당장 실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모든 음식점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야권 “졸속 협상 ... 재협상 하라” 촉구

靑 “기대 이상 성과” 한 “중지부 찍어야”

민주당 등 야권은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추가협상 결과에 대해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지켜내지 못한 졸속 협상이라고 비판하면서 전면적인 재협상을 촉구했다.
야권은 정부가 미 정부의 직접보증 방식인 수출증명(EV) 프로그램보다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QSA(품질체계평가)를 택한 것은 생색내기에 불과하고, 검역주권 확보와 SRM(특정

위험물질) 배제 문제도 명쾌하게 해결하지 못했다고 규정, 정부의 고시 연기 한나라당의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 수용을 촉구했다.
통합민주당 조정식 대변인은 22일 “정부의 추가협상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검역주권을 민영화한 것”이라며 “정부는 추가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 고시 관보 게재를 무기

한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타결과 관련, “국민적 우려와 불신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어제 쇠고기 협상이 타결이 됐는데 우리로서는 상당히 기대 이상의 성과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도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발표와 관련, “사실상 재협상에 준하는 추가협상”이라며 쇠고기 정국의 조속한 마무리 및 그 우선 조건으로서 국회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